

# 인공지능 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 문제\*

## — 바벨탑의 데자뷰?

남 형 두\*\*

논문

### 목 차

## I. 서론

1. 번역공모전 해프닝과 논문 집필 경위
2. 번역과 창작 — 인공지능 창작과 번역의 문제
3. 논의의 범위 및 구성

## II. 인공지능 번역과 저작권법 논의

1. 창의성과 번역의 의미
2. 복제 유추 — AIGT
3. 2차적저작물 논의 — AIGT와 AIAT 사이의 경계선 긋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2 S1A5C2A02093536)로서, 2023. 5. 26. 한국문학번역원 주최 심포지엄 “AI번역 현황과 문학번역의 미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여 낸 논문이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일호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님, 그리고 교정 작업을 도와준 이슬 변호사님(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께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III. 기계번역을 둘러싼 본말전도 현상

1. 전편집
2. 바벨탑의 비용 — 다양성 훼손
3. 고전번역의 특수성 — 전편집으로서 고전번역의 교감(校勘)

### IV. 기계번역 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문제

1. 저작권법 위반 문제
2. 저작권법 외 법률 위반 문제
3. 표절

### V. 마무리

### VI. 여론(餘論) — 문학번역의 미래

1. 기계번역의 한계
2. 역효과

## 초 록

번역은 창작의 한 태양이다. 인공지능 창작은 음악, 미술, 어문 등 여러 분야에서 팔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학번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실용화되고 있다. 최근 기계번역을 활용한 것이 드러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신인상 공모전 수상자에 관한 해프닝은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모았다. 인간의 도움 없는 순전히 인공지능 번역물인 AI-generated translation (AIGT)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번역한 AI-assisted translation (AIAT)은 저작권법상 번역으로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요소로서 기계번역 후 후편집(post-editing)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인간 이용자의 통제성과 주체성, 그리고 번역물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본다. 기계번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간 이용자의 과도한 전편집(pre-editing)은 자칫 원작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위와 같이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결정된 후에 이를 공표하는 단계에서 인간 이용자의 법적 주의의무 내지는 법적 책임을 논의한다. 기계번역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법적 책임 영역이 아닌 표절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 주 제 어

번역, 문학번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한 번역,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번역, 2차적저작물, 바벨탑, 표절

## I. 서론

### 1. 번역공모전 해프닝과 논문 집필 경위

2022년 11월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문학번역원)은 〈2022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2023년 2월 한 언론매체 기자가 번역신인상 부문 일본인 수상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수상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고 집중적으로 파헤쳐, 인공지능(AI) 번역기의 도움으로 국내 권위의 문학상을 받는 이변이 벌어졌다고 보도함으로써 크게 화제가 됐다.<sup>1)</sup>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문학번역원은 수상 취소를 포함한 논의를 위해 재심위원회를 꾸렸으나 재심사 끝에 원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sup>2)</sup>

이 무렵은 오픈AI(OpenAI)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인 챗지피티(ChatGPT, 이하 ChatGPT)의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2023. 2. 1.) 직후여서 가입자가 기하급수로 폭증하던 때였다. ChatGPT의 출시(2022. 11. 30.)

---

1) 박동미, “[단독]‘기계번역’ 기준도 세우기 前 수상… AI와 공생, 사회·윤리적 대응 시급”, 문화일보, 2023. 2. 8.; 박동미, “[단독] ‘AI 진화의 역설’… 한글 모르는데, 한국번역상 탔다”, 문화일보, 2023. 2. 8.; 박동미, “내가 번역상 받은 게 AI문제와 연결돼 화제된 것 놀라워”, 문화일보, 2023. 2. 9. 기사 등 참조.

2) 본 저자는 위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재심의 과정에서 공모전 대상(對象) 작품(이하 원문)을 수상자가 활용했다고 한 기계번역기(파파고)로 돌려본 결과물과 수상작을 대조한 결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자신이 직접 번역했으며, 더욱 정확한 번역을 위해 기계번역기를 사전의 대응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수상자의 설명에 부합한 것이었다. 외국어 말하기와 듣기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이 번역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맨부커 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한강과 공동 수상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도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작가이다. 실제 본 저자는 2017. 5. 8. 연세대학교 유영 번역상 시상식 이후 열린 세미나에서 스미스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영어로 몇 마디 나눈 경험이었다. 그런데 스미스의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맨부커상 수상에 장애가 되거나 문제로 지적된 적은 없다. 오히려 번역자에게는 원작에 대한 이해(reading comprehension), 도착어로서의 표현 능력, 도착어 콘텍스트에 대한 이해 등 문학적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한편, 문학번역원 수상자의 경우, 잦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 그림과 함께 배치되는 말뭉치 등 웹툰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기계번역이 쉽지 않은 영역에서 번역 능력을 발휘했으며, 원작(한국어)에 없는 도착어(일본어)권 문화의 특수성이 드러난 의역 등 현지화(localization) 측면에서 번역가의 창의적 기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는 개발자나 전문가의 전유물이던 인공지능을 일반의 관심사로 만든 중요한 변곡점이 된 사건이었다. 때마침 터져 나온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을 이용한 문학상 수상 뉴스는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고야 말았다.

문학번역원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문학번역원은 공모전 요강을 수정 보완했으며,<sup>3)</sup>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 번역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sup>4)</sup> 문학가, 번역 전문가 및 인공지능 기술자의 인공지능 번역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학제적 논의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번역과 인간 번역의 ‘경계선 긋기(line-drawing)’의 문제로 이어졌다.

문학번역 또는 번역문학의 영역에 새로이 등장한 인공지능 번역이라는 낯선 환경은 번역과 관련한 여러 당사자[원작자, 번역자, 기계번역 개발자, 기계번역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플랫폼, 출판자, 독자, 나아가 이들이 속한 문학계, 번역계, 기술계(플랫폼 포함), 출판계, 학계 등]를 법적 문제에 노출하고 있다. 경계선을 어떻게 그느냐에 따라 법적 이해관계가 달라져 중국적으로 법적 책임까지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 긋기’는 문학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문학·번역계의 요청에 따라 법학, 특히 저작권법학계 역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sup>5)</sup> 문학과 번역의 소비자일 뿐 이에 관한 식견이 부족한 본 저자가 단지 저작권법 연구자라는 이유로 이 논의에 초대받아 들어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 2. 번역과 창작 — 인공지능 창작과 번역의 문제

번역은 창작의 한 태양이다.<sup>6)</sup> 인공지능 창작은 음악, 미술, 어문 등 여러

3) 후술하는 주 86) 참조.

4) 모두에 언급한 심포지엄을 말한다.

5) 후술하는 ‘V. 마무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과제’는 법(저작권법 중심)과 윤리(표절)의 논의 구조를 갖추어 다시 문학계와 번역계에 되돌려져야 한다.

6) 원작과 별개로 번역이 창작의 하나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창작이 번역이라는 특이한 주장이 있어 소개한다. 존재하지 않는 원본을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꾸민 후 이를 번역한 형식의 소설 『불타는 작품』(윤고는 작)을 두고, 번역가 노승영은 번역의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원본을 복원하는 작업에 대해 “창작은 번역이다”라고 했다. 노승영, “[겨를] 복원”, 경향신문, 2023. 11. 9.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의 상품 카탈로그나 정부기관의 홍보 자료 등의 번역, 교육기관이나 학계의 저술 번역, 나아가 문학번역에 이르기까지 각종 번역에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실용화되고 있어, 기계번역을 둘러싼 논의는 인공지능 창작 논란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ChatGPT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한껏 고조돼 있어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 논란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다.

인간과 컴퓨터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법적 지위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일찍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sup>7)</sup> 이때는 크게 ‘컴퓨터가 만든 작품(Computer-generated works, 이하 CGW)’과 ‘컴퓨터가 도운 작품(Computer-assisted works, 이하 CAW)’으로 나누어 논의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의 자리를 인공지능(AI)이 대체해 ‘AI가 만든 작품(AI-generated works, 이하 AIGW)’과 ‘AI가 도운 작품(AI-assisted works, 이하 AIAW)’으로 논의하고 있다.<sup>8)9)</sup>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 창작물에 번역을 넣어보면 ‘인공지능이 한 번역(AI-generated translation, 이하 AIGT)’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번역(AI-assisted translation, 이하 AIAT)’ 논의로 이어질

7) Arthur R. Miller,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Databases, and Computer-Generated Works: Is Anything New Since CONTU?*, 106 Harv. L. Rev. 977 (1993) 등. 1993년 미국에서 스콧 프렌치(Scott French)라는 작가가 쓴 『Just This Once』라는 책이 나왔는데, 프렌치는 소설 『Valley of the Dolls』의 작가인 재클린 수잔(Jacqueline Susann) 풍의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그 컴퓨터와 협업으로 책을 썼다. 후에 수잔의 유족(재단)이 프렌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으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computer-generated works)의 저작권 논쟁이 촉발되었다. Ralph D. Cliffor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ra of the Creative Computer Program: Will the True Creator Please Stand Up?*, 71 Tul. L. Rev. 1675, 1691-1694 (1997).

8)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ly Intelligent Author*, 2012 Stan. Tech. L. Rev. 5 (2012); Robert C. Denicola, *Ex Machina: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Generated Works*, 69 Rutgers U.L. Rev. 251 (2016) 등.

9)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기존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 (i) 인간에 의한 창작물
- (ii)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한 창작물
- (iii) 인간의 지시에 의한 AI 생성물
- (iv) 인간의 지시와 무관한 AI의 자율적 생성물

박성호, “[박성호의 지재 공방]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 법률신문, 2023. 3. 16.

수 있다. 이를 순차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창작물(CGW/CAW) → 인공지능 창작물(AIGW/AIAW) → 인공지능 번역(AIGT/AIAT)

인공지능 번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기계번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종의 러다이트(Luddite)류의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공지능 번역의 편리함과 비용 절감 등의 필요 외에 막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계번역에서 AIGT와 AIAT의 ‘경계선 긋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3. 논의의 범위 및 구성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고 다층적이다. 기계번역 대상물 또한 실용적 글, 학술적 글, 문학적 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면의 한계상 효율적 논의를 위해 기계번역에 의한 문학번역에 집중하고자 한다.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할 때 문학에 대한 정의, 즉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논제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번역은 저작권법에서 2차적저작물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번역에 저작권법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인간 번역이 아닌 인공지능 번역이라고 하면, 이것을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번역에 해당한다고 하면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공지능 번역을 저작권법상 번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을 사용한 번역 결과물을 인간 번역자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계번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경계선 긋기’의 요구에서 출발했다. 컴퓨터 창작물(CGW/CAW), 인공지능 창작물(AIGW/AIAW)과 관련한 논의가 인공지

능 번역(AIGT/AIAT)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 글은 ‘경계선 긋기’에 관한 일반의 막연한 생각을 넘어, 실제로 금 긋기가 실행될 때 발생할 법적·윤리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작업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저작권법과 표절금지 윤리를 연구하는 본 저자가 던진 일종의 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토대로 향후 문학·번역계의 비판을 거쳐 정금(正金)이 제련(製鍊)되어 나오리라 기대한다(II장).

위 II장이 인공지능 번역물(초벌)에 대한 후편집(post-editing) 작업에 집중한 것이라면, 인공지능 번역기가 번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간 번역자가 사전에 원문을 편집하는 전편집(pre-editing)에 초점을 맞추어, 과도한 전편집으로 번역이 창작을 바꾸어 버리는 일종의 본말전도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문학과 예술의 영역인 문학번역에서 날로 발전하는 기계번역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문학번역의 필요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바벨탑<sup>10)</sup>으로 상징되는 언어의 통일을 통한 소통에의 인류의 숙원(宿願)은 ‘다양성 훼손’이라는 높은 비용을 청구할지도 모른다(III장).

그런데, ‘경계선 긋기’라는 어려운 작업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창작물(번역물)이라 볼 수 없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마치 인간이 자기 것인 양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인간 창작물과 기계번역 결과물이 혼재(混在)하는 세상에서 결과만 좋으면 됐지 굳이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는가, 또는 과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입장의 차이는 결국 가치관 논쟁으로 귀결되므로, 이 글에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본 저자는 번역이 문학의 한 영역으로서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터 위에서 과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법적·윤리적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적 논의, 형

10) 번역에 관한 논의, 특히 법적 논의를 할 때 ‘바벨탑’에서 시작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Jacques Derrida (Trans. Joseph F. Graham), “From Des Tours de Babel”,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Rainer Schulte & John Biguenet (e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 218-227; Shlomit Yanisky-Ravid & Cynthia Martens, *From the Myth of Babel to Google Translate: Confronting Maliciou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and Algorithmic Biases in Online Translation Systems*, 43 Seattle U. L. Rev. 99 (2019).



법적 논의, 나아가 인간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으로 발표할 경우 저작권법 문제를 넘어 윤리 차원의 표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인공지능 번역을 둘러싼 법과 윤리의 문제를 저작권법과 표절금지 윤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IV장).

마무리(V장) 후에, 번역의 한계를 인공지능 번역이 극복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시도함으로써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외번역(韓外翻譯)이 인공지능에 과도히 의존하면 오히려 한국문학을 질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게 할 가능성을 여론(餘論)으로 덧붙인다(VI장).

## II. 인공지능 번역과 저작권법 논의

### 1. 창의성과 번역의 의미

#### (1) 문학계와 법학계의 서로 다른 언어 용례

인공지능 창작에 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법학이 명백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역시 AIGW와 AIAW를 구분하는 경계선 긋기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 영역으로 가져오면 ‘인간의 번역으로 볼 수 없는 기계번역(AIGT)’과 ‘인간의 번역으로 볼 수 있는 기계번역(AIAT)’을 나누는 경계가 어디인가이다.

그런데 이 질문은 기시감이 있다. 동물,<sup>11)</sup> 자연력,<sup>12)</sup> 신적·영적인 힘<sup>13)</sup> 등

11) 사막에서 뱀이 지나간 흔적, 나뭇가지 위에 새가 지은 둥지, 꿀벌집단이 만든 벌집 등.

12) 예술의 정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력이 만든 것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미국 판결을 소개한다. 비록 정원사(예술가)가 공원의 정원을 설계·디자인한 후 각종 꽃과 나무를 심고 조성한다고 해도 정원은 햇빛, 바람, 비 등 자연력(force of nature)에 의해 형성되는 가변적인 것으로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Kelley v. Chicago Park Dist., 635 F.3d 290, 304 (7th Cir. 2011).

13) 미국 판결 중에는 신의 계시로 만들었다(product of divine revelation)고 주장하여 저작권 논란이 된 재판 사례가 더러 있다. Oliver v. Saint Germain Foundation, 41 F. Supp. 296 (S.D. Cal. 1941); Urantia Foundation v. Burton, No. K 75-255 CA 4, 1980 WL 1176, at \*1 (W.D. Mich. Aug. 27, 1980); Urantia Found. v. Maaherra, 114 F.3d 955 (9th Cir. 1997); Penguin Books U.S.A., Inc. v. New Christian Church of Full Endeavor, Ltd., No. 96 CIV.4126 (RWS), 2000 WL 1028634, at \*8 (S.D.N.Y. July 25, 2000), va-

‘비인간(non humanbeings)이 만든 것도 예술일 수 있는가?’, ‘창의성은 인간의 전유물인가?’라는 오랜 질문에서 겪었던 고민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예술론 영역의 질문은 법학의 논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의 논의로 진전되면 법학의 논제가 된다. 이 두 단계를 하나로 묶거나 혼동하는 것은 합리적 논의를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학)은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능력도 없고, 구분해서도 안 된다. ‘인간에게만 창의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비인간에게도 창의성이 있는 것인지’, 역시 법학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sup>14)</sup> 예술의 정의와 창의성의 주체는 합의(consensus)의 영역일 뿐 법(학)이 결정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sup>15)</sup> 저작권법은 예술의 정의 또는 예술성의 고하에 관심이 없고, 단지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충족 여부에 관심을 둘 뿐이다.

한편,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반드시 동일한 것도 아니다. 나라와 문화 수준, 그리고 시대에 따라 저작물 보호 요건으로서의 창작성 기준은 다양하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각 나라의 법원이 정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법의 세계에 들어온 창작성·창의성 개념과 일반 학문이나 예술에서 논의하는 창작성·창의성 개

cated by 2004 WL 906301, at \*1 (S.D.N.Y. Apr. 27, 2004).

- 14) 이와 관련한 사회학, 인지심리학 등 인접 학문이나 예술에서의 논의는 주로 비인간의 하나인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나는 것으로서 철학적 논의로 이어진다. 이런 거대 담론을 저작권법상 저작물성의 한 요소인 창작성 안에서 논의한다면 지나치게 답답할 뿐 아니라 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오케디지(Okediji)는 독창성(originality)을 저작성(authorship)에서 나온 독특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저작권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서 독창성을 논의하는 인지심리학(science of cognitive psychology)에는 틈(gaps)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본 저자의 문제 제기과 비슷하다. Ruth L. Okediji, *Creative Markets and Copyright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Reconfiguring the Public Benefit for a Digital Trade Economy*,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 2018, Issue Paper No.43, p. 21.

- 15)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결정할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의의 산물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정 계층만 전유하는 예술이 존재했던 시대에 대한 비판으로 예술에 관한 합의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알터 베나민(Walter Benjamin) 등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서 비인간의 예술 주체와 관련된 본문에서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수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창의성 - 규칙과 변형, 그리고 맥락화”, 『프랑스학연구』, 제86호, 프랑스학회(2018), 주 3, 320쪽(원출처: Christine Palmiéri, «Jacques Rancière, Le partage du sensible» dans Revue d'art contemporain ETC, Numéro 59, Montréal, 2002, p. 35.) 참조.

넘은 같은 것이 아니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합리적 논의의 출발이 된다.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과 인간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번역에는 여러 층위가 있는데, 번역 그 자체 외에 번역 대상이 속해 있는 장르적 맥락도 고려해야 하므로 경계선 긋기의 기준을 도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는 위에서 본 ‘무엇이 예술인가’의 문제와 같이 직관적 영역 내지는 인간의 합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서 ‘직관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자연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의 글이나 작품을 자기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은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18세기 이전에도 존재했다.<sup>16)</sup> 로마 시대에는 이를 ‘plagium’, ‘plagiarius’라고 했는데 서구의 지적 전통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고, 일본은 도작(盜作), 한국은 도습(蹈襲) 등으로 용어와 표현은 제각각 달라도 윤리적 차원에서 금기시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sup>17)</sup>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공지능 창작(번역)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나타났고, 인공지능이 한 창작(번역)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자기가 아닌 ‘남의 것’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같아도, 그 ‘남’이 ‘인간(타인)’이 아니라는 점—인공지능—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인공지능 창작(번역)과 관련하여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 문제는 오늘날 문화예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의 사회문제를 권리·의무의 세계로 편입시키는 권리담론(Rights Talk)<sup>18)</sup>의 자장(磁場)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 다만 인류 창작의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가까운 과거라 할 수 있는 저작권 시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권리담론 중 저작권(법)의 틀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16) 음악, 미술, 문학이 생겨났을 때부터 창의성에 기반한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내거나 비슷하게 꾸며내는 경우는 허다했을 것이다. 저작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허용되는 모방과 차용이 있었는가 하면, 베끼기와 저작성 문제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그중 일부가 저작권법으로 흘러들어와 법적 규율을 받게 된 것이니, 인류 역사에서 표절 문제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 저작권법이 만들어져 작동한 것은 극히 일부 기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Scott McGill, *PLAGIARISM in Latin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30 참조.

17) 남형두, “한시(漢詩)의 표절에 관한 법학적 논의—허난설헌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제39집, 연민학회(2023), 135-140쪽.

18) 권리담론이란 표현은 윤리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라는 법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산권(property)적 논의로 진전되었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정리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을 이용한 번역에 대해 인간의 번역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경계선 긋기는 법 이전에 합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담론이 극성을 부리는 현실에서 창작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권리담론인 저작권법의 논의가 이와 같은 합의 도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예술 영역의 문제를 저작권법적 논의로 전부 해소할 수는 없다. 창작의 세계, 문학과 예술 세계의 갈등 중 권리담론만으로 풀기 어려운 그 남은 공간은 표절금지 윤리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아래 IV. 3. 항).<sup>19)</sup>

## (2) 저작권법으로 환원된 논의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번역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법적 문제, 주로 저작권법적 문제로 환원하기도 한다.<sup>20)</sup> 기계번역도 마찬가지여서 저작권법 전반에 걸쳐 살펴볼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번역이 인간의 간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AIGT’인가, 아니면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AIAT’인가에 따라 그 번역 결과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저작물이 될 수 있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저작권자가 인간이 아니라면 누구나 그 결과물을 가져다 써도 무방한지, 이때 인공지능 번역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지 등, 물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위 ‘경계선 긋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래 기계번역에 관한 저작권법상 논의는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있었으나,<sup>21)</sup> 이때 기계번역은 문법과 형태소 분석에 따른 기계번역으로서 오늘날 귀

19) 예술과 창작 세계에 대한 권리담론은 때마침 불어닥친 사법화(juridification), 즉 모든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세태에 맞물려 법률가를 불러들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술과 문학 영역에 ‘법률가의 지배(juristocracy)’가 만연해져 예술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사례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0) 아르헨티나 법학자인 카바넬라스(Cabanellas)가 대표적인데, 번역을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분석한 책에서 번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적 문제를 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다. Guillermo Cabanellas, *The Legal Environment of Translation*, Routledge, 2014, pp. ix-x.

21) 일본의 기계번역에 관한 저작권심의회의 보고서로는 다음 참조. 著作権審議会第9小委員会(コンピュータ創作物関係)報告書, 公益社団法人著作権情報センター CRIC, 平成5年11月文化庁(1993년), [https://www.cric.or.jp/db/report/h5\\_11\\_2/h5\\_11\\_2\\_main.html#3\\_1](https://www.cric.or.jp/db/report/h5_11_2/h5_11_2_main.html#3_1)

납적 방식에 의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 기계번역은 데이터 입력에 기반한 귀납적 방식으로, 크게 통계적 기계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SMT)과 인공신경망 기계번역(Artificial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구글 번역과 파파고 번역은 후자에 속한다.

오늘날의 귀납적 방식에 의한 기계번역이 나오기 전 연역적 방식에 의한 기계번역에 관여하는 자는 기계번역 시스템 사용자, 원문해석·언어변환·역문생성 등의 프로그램 작성자, 기본·전문 용어 등 사전 데이터베이스 작성자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sup>22)</sup> 그리고 이런 기계번역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원문을 그 내용 및 용도에 맞게 번역하기 위해 통상 상당한 정도의 전편집 및 후편집을 수행하고 있으며, 거기에 창작 의도와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이해됐다.<sup>23)</sup> 결과물인 번역물과의 관계에서는 후편집 쪽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기 쉽지만, 번역한 결과 상대방 언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원래 문장 표현을 바꾸는 것은 전편집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편집과 후편집은 상보적(相補的) 관계에 있어 전편집을 제대로 하면 후편집이 편해지는 등의 관계가 있으므로, 전편집부터 후편집까지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sup>24)</sup>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을 번역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분히 저작권법 시각에서 제기하는 도발적인 물음이다. 저작권법은 번역을 2차적저작물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원작과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제5조 제1항). 기계번역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번역에 해당한다면, 기계번역 결과물의 저작물성(copyrightability), 저자성(authorship), 저작재산권과 예외 등, 저작권법상 모든 쟁점의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기계번역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번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작성·창의성에 관한 법(저작권법)의 논의와 일반의 논의에 차이가 있는

(2023. 4. 30. 검색)(이하 일본저작권심의회 보고서).

22) 위 보고서.

23) 위 보고서.

24) 위 보고서.

것처럼[위 (1)항] 번역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sup>25)</sup> 번역을 서로 다른 언어 간 변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번역문학계의 일반적 이해라면,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로 이해한다. 저작권법 시각에서 번역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저작권법상 번역의 의미

저작물은 인간 창작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차적저작물 역시 저작물의 하나이며 번역은 2차적저작물 작성 방법의 한 태양으로 열거돼 있으므로(제5조 제1항), 저작권법상 번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간을 주체로 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현행 저작권법상 번역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번역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계번역을 번역·문학계에서 번역의 한 유형으로 말할 수 있을지언정, 저작권법에서 이를 번역으로 언급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오로지 기계가 번역한 것, 즉 인간 이용자의 전후 편집이 없는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인 번역이라 할 수 없다.

### 2) 변형의 정도

기계번역의 결과물 —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이 더해지기 전 상태(이하 변경 전 원형)와 등가물(equivalence)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을 토대로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동일한 경우: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이 없는 경우

이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기계번역을 사용한 인간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간 이용자의 2차적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기계(인공지능 번역기)에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아 기계 번역기를 만든 설

25) 비슷한 예로 패러디(parody)도 들 수 있다. 문학에서 허용하는 패러디와 법이 허용하는 패러디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판례에 나오는 패러디는 저작재산권의 예외인 공정이용의 한 태양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학 또는 예술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패러디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남형두, “법과 문학, 오만과 편견을 넘어”, 남형두(편), 『문학과 법 — 여섯 개의 시선』, 사회평론아카데미(2018), 51-52쪽.

제자 또는 운영자를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해당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매번 다른 저작물(원본)을 입력했을 때 특정 결과물(번역물)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개별 저작물(원본)을 어떤 사유를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 결과물(번역물)을 내놓는지 알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기여’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존하는 몇몇 기계번역(구글번역, 파파고 DeepL 등)은 귀납적 방식에 의한 기계번역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과물(번역물)이 유사함을 넘어 동일한 것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즉, 어떤 인공지능 기계번역을 쓰더라도 번역의 결과물이 같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계 번역기를 사용하는 인간 이용자의 기여(전후 편집)가 없는, 그야말로 ‘스타트 버튼(start button)’ 또는 ‘엔터 키(enter key)’를 누른 것이 전부인 기계번역은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변형이 있는 경우: 기계 번역기를 사용한 인간 이용자가 후편집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편집을 통해 기계번역 결과물에 인간 이용자가 변경을 가한 경우에 그 인간 이용자의 주관과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변형물이 (a) 사소한 증감에 불과하여 ‘변경 전 원형’(여기서는 기계 번역기를 이용하여 산출된 출력물 자체로서 후편집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상태)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볼 만한 경우; (b) ‘변경 전 원형’과 다른 ‘실질적 개변’이 행해졌다고 볼 만한 경우. 저작권법상 전자는 원작과 동일한 것, 후자는 2차적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변형이 도를 넘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경우: 독립저작물

후편집 결과 ‘원작’과 다른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졌다면 2차적저작물이 아닌 독립저작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번역이 아닌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문학 ‘번역’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이 전혀 없는 경우, 기계번역 결과물은 원작과

등가물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복제’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아래 2.항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둘째,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에 따른 변형이 있는 경우는, 다시 ‘사소한 증감’에 그쳐 위 첫째와 같이 동일성, 즉 복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실질적 개변으로 인정받아 2차적저작물의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아래 3.항에서 상술할 것이다. 앞서 말하면, 그 구분, 즉 동일한 복제로 보는 경우와 2차적저작물로 보는 경우를 나누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상 논의는 결국 AIGT와 AIAT의 논의와 연결된다. 즉, AIGT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결국 원작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반면, AIAT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한 유형인 ‘번역’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저작권법상 ‘번역’은 일반에서 쓰는 ‘번역’과 그 의미, 특히 법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 복제 유추 — AIGT

일반적으로 오늘날 귀납적 방식에 의한 기계번역에서도 대부분 전후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 차원이긴 하지만 전후 편집이 없는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인간 이용자의 창작적 노력 또는 기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고 단지 원작에 대한 복제로 봐야 한다는 견해<sup>26)</sup>는 본 저자의 견해와 비슷하다. 여기서는 논의를 위해 인간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전혀 없는 극단적인 예로서, 인간 이용자의 역할이 그야말로 ‘엔터 키(enter key)’를 누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기계번역을 복제 중 점역(點譯) 및 사진촬영과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6) 앞의 일본저작권심의회 보고서; 上野達弘, “著作権法における侵害要件の再構成(2・完) — 「複製又は翻案」の問題性 —”, 知的財産法政策研究 42号, 2013, 45쪽; 半田正夫・松田政行,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ル 1』(第2版), 勁草書房, 2015, 231쪽; 奥邨弘司, “クラウド・サービスと著作権”, Law & Technology, No. 68, 2015, 30쪽 등.



## (1) 점역과 비교

번역은 창작의 일종으로서 통상적인 번역은 2차적저작물이 되는데, 이것과 극단적인 기계번역을 복제로 말하는 것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논의를 위해 ‘점역’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전후 편집이 없는 기계번역—극단적인 기계번역—에서 인간 이용자가 한 일이라고는 ‘엔터 키’를 누르는 것이 전부라는 점에서 묵자(墨字) 파일을 점자(點字) 파일로 변환<sup>27)</sup>하는 점역을 떠올릴 수 있다. 송곳과 유사한 점필(點筆)로 점자 종이에 꺾꺾 눌러 수작업(手作業)으로 점역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점역은 컴퓨터 환경에서 점역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점역 변환 후 ‘엔터 키’만 누르면 점자가 출력된다. 그렇게 출력된 점자를 비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지만, 시각장애인은 묵자로 된 원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본에 대한 복제의 다른 유형인 인쇄, 사진촬영, 복사 등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정의<sup>28)</sup>에서 ‘그 밖의 방법’에 점역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점역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기계번역도 머지않은 미래에 복제의 한 유형으로 들어가거나 해석으로 ‘그 밖의 방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점역 소프트웨어와 기계번역 소프트웨어의 질적 차이로 이 견해를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복잡할 뿐 아니라, 단순히 묵자의 특정 자음과 모음을 점자 기호로 매칭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번역 사례에 관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차이는 소프트웨어의 복잡성, 고도성, 개발 난이성 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여하에 관한 것일 뿐,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용자와는 무관하다. 극단적인 기계번역의 이용자는 점자 소프트웨어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번역을 위해 그가 하는 작업은 오로지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계번역이나 점역이나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다르지 않다.

27)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28) 제2조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후 편집이 없는 기계번역이 점역과 같은 단순 복제라는 것, 즉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더 들 수 있다. (i) 입력자(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사람)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한 원작을 동일한 기계번역 소프트웨어에 입력한다고 할 때, 입력자(기계번역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sup>29)</sup> (ii) 기계번역 소프트웨어(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글과 파파고)에 따라서도 그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구글과 파파고의 결과물이 같지는 않다. 이는 이들 소프트웨어가 중점을 두고 있는 언어, 기술개발의 상황 및 순서(텍스트, 이미지, 문서, 웹사이트), 적용 파일(doc, pdf, hwp 등) 등에 따른 우열이 있으나,<sup>30)</sup> 이는 선발·후발 주자의 차이로서 일시적·과도기적 현상일 뿐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 만약 소프트웨어별 기술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번역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면<sup>31)</sup> 모든 기계 번역물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인간 입력자의 전후 편집이 없다면 모든 기계 번역물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글과 네이버가 그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의 부당함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 (2) 사진촬영과 비교

기계의 발명 및 발전으로 필사가 인쇄와 복사로, 그림 묘사가 사진촬영으로 복제의 방법이 진화하고 있으나, 인쇄·복사·사진촬영은 그 자체에 창의적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2차적저작물로 보지 않고 단지 복제의 한 태양으로 열거돼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물론 원본 저작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진(예를 들어 풍경 사진) 촬영은 저작권법상 창의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도 하는데,<sup>32)</sup> 기계번역 논의는 원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29) 입력 시점에 따라 기계번역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이다.

30) 소비자는 언어별로 또는 번역 대상물에 따라 상대적 우위에 있는 번역 소프트웨어를 선택 사용한다.

31) 번역 대상물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언어 간 번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32) 물론 사진에서도 원본이 법으로 보호되는 경우로서 원본을 인물로 본다면, 즉 인물 사진촬영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초상권 또는 저작권 문제가 없다면, 사진촬영자의

인정되는 사진촬영'과 다르다. 기계번역이 번역의 정확성에 따라 기능성이 강조된다면, 이는 창의적 요소가 그만큼 줄어들어 마치 복사기기 내지 점역기기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기계번역의 대상 중에 실용물로서, 예컨대 상품 카탈로그, 정형화된 문서 등을 기계번역으로 번역하는 것은 복제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심미성, 예술성이 중시되는 문학번역의 경우에는 복제로 보기 어렵다. 물론 기계번역의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인간 이용자의 추가적인 기여(전후 편집) 없이도 심미성과 예술성까지 겹들인 번역이 가능하게 되면, 이때에는 복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기계번역 전후로 인간 이용자의 전후 편집이 필요하리라는 점에서 복제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전후 편집이 있어야만 기계번역을 복제가 아닌 2차적저작물로 볼 것인가의 논의를 해야 한다(아래 3.항).

### (3) 복제로 구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전후 편집이 없는 극단적인 기계번역이 원본에 대한 복제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살펴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만약 기계번역 결과물에 심각한 오류 또는 오역이 있음에도 인간 이용자가 후편집을 하지 않고 이를 자기 번역물로 공표했다고 가정하자. 이 엉성한 번역물로 인해 인간 이용자(기계 번역기를 이용한 번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본 저자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후편집을 통해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인간 이용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데, 오히려 인간 이용자가 기계번역 운영자를 상대로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구글 번역의 서비스 목록에 들어 있는 구글 서비스 약관<sup>33)</sup>에 따르면, 보증 배제와 면책 등의 조항을 통해 구글은 사실상 이런 책임 추구를 무력화할 준

창작적 기여(피사체 선정, 셔터 속도, 조명 등)에 따라 창작성을 인정하여 사진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다. 사진의 저작권적 보호가 저작권법의 창작성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박성호는 저작권법상 창작성의 법제사적 연구로서 사진저작물을 들고 있다. 박성호, "[박성호의 지재 공방] 카메라 '셔터' 누르기, 혹은 AI '프롬프트'에 텍스트 입력하기", 법률신문, 2023. 3. 23.

33) Google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Google, <<https://policies.google.com/terms?hl=ko>>, (2023. 5. 21. 검색). 이하 구글 서비스 약관은 이 사이트를 참조했다.

비가 되어 있다. 준거법과 관할 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sup>34)</sup> 구글을 상대로 기계번역의 오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는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약관 등에 명확히 기재할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이는 구글 번역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로 인한 책임을 구글 서비스에 관한 일반약관의 보증 배제와 면책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위 예에서 인간 번역자가 기계 번역기를 이용한 것 외에 아무런 창작적 기여(전후 편집을 말함)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원작의 복제물에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인간 번역자에게 기계번역을 통한 번역을 허락한 원본(원작)의 저자로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복제권 침해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복제 과정에서 원작의 내용이 잘못 복제(기계번역)된 것에 대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이다. 그 책임은 인간 이용자와 기계번역의 운영자에 물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계번역 운영자(예를 들어 구글)는 약관으로 그 책임을 피해 가려 할 것이다. 그런데 구글 번역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구글 약관은 구글과 인간 이용자에 적용되는 계약의 일부일 뿐, 원본(원작)의 저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구글이 서비스 약관의 보증 배제 및 면책 조항으로 원본(원작) 저자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구글 약관에는 구글의 결과 책임을 부정하는 조항도 두고 있는데, 이 역시 구글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간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 약관의 당사자가 아닌 원본(원작) 저자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원본(원작)의 저자가 특정인에게 자기 작품을 번역할 것을 허락한 경우 그 특정인이 기계번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전후 편집을 하지 않은 채, 출판할 때 원본 저자의 저자명과 함께 번역자명에 자신을 기재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기계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원본 저자는 기계번

34) 참고로 이용자가 구글(유튜브)을 상대로 제소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남형두, “빅테크에 대한 국제사법의 대응 -구글 합의관할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국제거래법연구』, 제31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2022).

역 운영자에 대해 자기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전후 편집이 없는 기계번역의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전제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기계번역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 이용자의 전후 편집이 필요 없게 될 때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면, 복제 과정에서 원작의 내용이 훼손된 데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은 기계번역 운영자의 약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 (4) 정리

전후 편집이 없는 기계번역은 점역이나 사진촬영과 같은 ‘복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계번역이 복제를 넘어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해당하는 전후 편집은 무엇일까로 논의의 초점이 이동하게 된다. 이는 결국 AIGT와 AIAT의 경계선에 관한 논의이다. 아래 3.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3. 2차적저작물 논의 — AIGT와 AIAT 사이의 경계선 긋기

#### (1) 통제성·주체성

번역 영역에서 AI-generated translation과 AI-assisted translation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인간(‘인간 이용자’)의 번역 전반에 관한 통제성 또는 주체성<sup>35)</sup>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계번역 전후의 편집 과정에서 인간 이용자가 그 번역 전체를 기획하고 통제하며 주도하고 있는가, 번역의 최종 확정을 인간 이용자가 하고 있는가 등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AIGT와 AIAT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번역은 크게 원문 저자가 직접 번역하는 ‘자기 번역’과 타인이 번역하는 ‘타인 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IV. 1.에서 상술함). 기계번역의 출현과 성능 고도화는 자기 번역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원문 저자의

35) 통제성과 주체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주체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한다는 것은 주체이기 때문이다.

통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기 번역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문제는 뒤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 통제성·주체성 측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 번역이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타인 번역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힌다.

번역의 통제성·주체성은 시간 순으로 보면 ‘번역 대상의 선택’에서 ‘번역의 최종 확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있다. 번역 대상의 선택, 즉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라는 것은 번역자 통제성의 첫 관문이다. 문학번역에서 번역 대상물(원전 소설 등)을 선택하는 것은 시대적 맥락, 독자의 관심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창작적 선택 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번역자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번역할 것인지를 선택하기도 하지만(자발적 선택), 수동적으로 번역 대상이 정해지기도 한다(수동적 선택). 수동적 선택은 번역자가 특정 기관의 소속원이어서 번역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없거나,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자발성(선택의 자유)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퇴사하거나 계약 체결의 자유로서 그 강제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수동적 위치에 있긴 해도 인간 번역자의 번역 대상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면 번역기계(번역 소프트웨어)는 인간 이용자의 입력에 따라 자동 연산 후 번역물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번역 대상을 고르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인간 번역자(타인 번역)가 번역 대상을 고르는 것을 번역 전반에 관한 통제성의 첫 관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번역 대상을 골라 기계 번역기에 입력했다는 것만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 인간 이용자의 통제성이 번역의 전 과정에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후편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번역을 확정할 때 비로소 인간 이용자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대상의 선택이 번역의 첫 관문이라면, 최종 확정은 마지막 관문이다.<sup>36)</sup>

여기에서 검토와 후편집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즉 극단적으로 말해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대해 다음[아래 1) 내지 5)]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수정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확정한다면(엔터 키 누름), 인간 이용자의 통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sup>37)</sup> 실질적인 검토와 후편집은 기계번역을 이용하

36) 물론 전편집은 위 두 관문 사이에 들어가는데, 전편집은 하지 않기도 하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논의는 후편집을 중심으로 한다.

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계번역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인간 이용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들어간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검토·수정 등 후편집 작업이 창의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라면 ‘창작적 기여’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계번역 소프트웨어를 통해 나온 결과물(초별 결과물)에 대한 인간 이용자의 후편집은 그 변형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그 변형이 ‘사소한 것’이라면 인간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없어 ‘스타트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것이나, 그 변형이 ‘실질적 개변’에 해당한다면, 인간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후편집이 ‘실질적 개변’에 해당하는지는 바로 ‘경제선 긋기’에서 통제성·주체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37) 대리번역에서 기계번역을 이용한 번역을 유추할 수 있는 한 사례를 소개한다. 2005년도 출간되어 1년 만에 110만 권이 팔린 번역서 『마시멜로 이야기』의 역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 대리번역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이 실제 번역자라는 사실을 언론에 밝힌 사람(A)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이에 131명의 독자가 원고로서 대리번역인지 모르고 속아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출판사와 번역자(유명 방송인)를 상대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A 및 방송인과 각기 다른 번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출판사와 A 사이의 계약에서는 A가 번역자임을 밝히지 않았기로 한 사실, A가 번역한 것을 참고자료 형태로 방송인에게 제공했고 방송인이 이를 기초로 한국 독자들의 감성에 맞게 자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 \*\*\* (방송인)이 비록 A의 번역자료를 참고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책의 출간을 위한 번역작업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지 A가 이 사건 번역과정에 일부 참여한 사실을 들어 피고들의 위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이상 판결문의 의미 처리는 본 저자가 한 것임). 한편,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데 그치지 않고, “번역서를 구입하는 원고들로서는 원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번역을 담당한 사람이 이전에 여러 번 번역서를 출간하는 등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 책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함이 일종의 합리적인 번역서의 선택방법이라고 여겨지는바, 가사 이 사건 책이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책의 발간 당시 피고 \*\*\* (방송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그 이름 자체만으로는 번역서인 이 사건 책의 수준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 (방송인)의 번역서라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책의 수준을 신뢰하면서 이를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방론(傍論)을 제시함으로써, 피고 방송인과 피고 출판사의 부적절한 번역 출판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판결에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합92054 판결. 이상에 따르면 번역서의 대리번역 여부에 관한 위 판시 중 대리번역으로 보지 않았던 판단 부분(밑줄 친 부분)은 단순한 기계번역(AIGT)인지 아니면 기계번역을 이용한 인간 번역자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것(AIAT)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경제선 긋기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번역자의 권위와 책임

기계번역을 이용한 결과물이 AIGT가 아닌 AIAT로 되기 위해서는, 즉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기계번역을 이용한 인간 번역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번역 출판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기계번역 이용 정도에 무관하게 그 번역에 관한 인간 번역자의 권위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원문과 번역, 원저자와 번역자의 관계를 정리한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의 다음 글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인간 이용자와 기계번역과의 관계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번역자가 따라야 할 최고 권위는 저자의 개인적 문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자 대부분은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 ‘아름다운 프랑스어’(아름다운 독일어, 영어 등), 즉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프랑스어(독일어 등)의 공동 문체라는 권위에 복종한다. 외국 저자에 대해 역자는 자신을 이 권위의 대사로 여긴다. 바로 여기 오류가 있다. 특정 가치를 지닌 모든 작가들은 이 ‘아름다운 문체’를 위반하며 바로 그 위반에 그 예술의 독창성(결국 존재 이유)이 있는 것이다. 역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자의 그런 위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블레나 조이스, 셸린의 경우처럼 위반이 분명한 경우는 어렵지 않다. 한데 그 ‘아름다운 문체’에 대한 위반이 미묘하고 보일 듯 말 듯하며, 숨어 있고 은밀한 작가들이 있다. 그런 경우 위반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sup>38)</sup>

번역자가 따라야 할 최고 권위가 원저자의 개인적 문체이듯, 기계번역을 이용하는 번역에서 기계 번역기가 따라야 할 최고 권위는 인간 번역자(기계 번역기를 이용하는 인간)의 문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계 번역기가 인간과

38)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김병욱 역), 『배신당한 유언들(원제: LES TESTAMENTS TRAHIS, 1993)』, 민음사(2013), 160쪽: “권위 문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번역의 미묘함을 지적한 쿤데라의 글을 번역으로 접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번역자 김병욱이 쿤데라의 원문을 쿤데라가 말하는 개인적 문체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독자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인용문에 있는 밑줄은 본 저자가 친 것임).



같은 의식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위의 복종’<sup>39)</sup>이란 관념 또는 관계는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인간 이용자의 기계번역에 대한 통제 행위로는 논의해야 한다. 쿤데라 식으로 표현한다면, 인간 번역자가 기계번역을 이용할 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계번역이 내놓은 표준적인 문체를 벗어나 인간 번역자가 생각하는 원문에 가깝게(직역의 경우), 또는 인간 번역자가 도착어권에 맞는 문체와 표현으로(의역의 경우) 기계번역의 결과를 주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 수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 번역자가 져야 하고, 그 수정이 번역역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권위는 당연히 인간 번역자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 2) 일관성

AIAT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번역을 이용한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위 1)에서와 같이 인간 번역자의 책임하에 하나의 작품으로서 일관성 또는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번역 작품에서 번역의 일관성이 있을 때 비로소 번역자는 자기 작품으로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그렇지 못했던 잘못된 번역 관행을 통해 번역의 일관성이 통제성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본다.

문학번역에서 지금은 사라진 일이지만, 한때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분담 번역하게 한 후 이를 모아서 교수의 번역물로 출간한 사례 또는 관행이 있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sup>40)</sup> 이때 자신의 이름을 역자(譯者)로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자의 서문 및 후기 등 어디에도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대학원생은 기계번역을 이용한 번역에서 번역 소프트웨어에 비견될 수 있다. 한 사람의 번역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앞뒤 또는 장별로 문체가 다르고 번역의 수준도 달라서 해독하기 어려운 번역서는 이런 분담 번역의 의혹을 사곤 했는

39) 여기에서 말하는 ‘권위’의 주체로 원저자와 인간 번역자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권위의 복종’이란 의식적(conscious) 행위를 고려하면 후자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기계 번역기와 원저자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으나, 기계 번역기를 이용하는 인간 번역자는 ‘이용’이라는 접촉점이 있기 때문이다.

40) 우리나라 주요 영미 고전문학 번역의 수준을 점검하고, 특히 표절 실태에 대해서 정리한 것으로는 다음 문헌 참조.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영미고전문학번역 평가사업 - 번역문화 혁신을 위한 현황점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 일반연구분야 연구결과보고서(2004).

데,<sup>41)</sup> 이때 분담 번역을 지시하고 번역 방침을 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각자의 번역이 끝난 후 전체적으로 작품성이 훼손되지 않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후속 작업을 한다면, 비록 분담 번역을 거쳤을지라도 그나마 단독 역자로 표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양보는 기계번역을 이용하는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후속 작업’은 기계번역에서의 ‘후편집’에 해당하는 것인데, 분담 번역 후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후속 작업에는 캐릭터별 화법(구어체, 문어체, 줄임말 문체 등)의 일치,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적절한 사용, 지명·고유명사·호칭 등의 일관성, 번역 어휘 선택의 일관성 등을 들 수 있다.

### 3) 명백한 오류 수정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AIAT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은 아닐지라도 명백한 오류로 인한 치명적 결과를 막는다는 점에서 결코 사소한 작업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본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소개한다. 줄지, 『표절 백문 백답』(청송미디어, 2017)에 나오는 백문 중 25번 질문을 구글 번역과 파파고 번역으로 일역(日譯)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42)</sup>

원문: “각주, 미주, 내용주는 어떻게 구별해 써야 할까?”

구글 번역: “脚注、米州、内容主はどのように区別して使うべきか”

파파고 번역: “脚注、迷走、内容注はどのように区分して書くべきか”

양 번역기는 모두, 주(注)의 위치에 따라 본문 밑에 다는 각주(脚注)에 대해서는 정확한 번역을 했지만, 장·절의 말미 또는 저술의 말미에 다는 미주(尾注)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 오류를 냈다.<sup>43)</sup> 게다가 구글 번역은 ‘내용주’의

41) 문학번역에서는 이런 관행이 많이 사라졌는데, 학술 영역의 번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2) 기계번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기계 번역기를 이용한 시점이 중요한데, 이 글을 심포지엄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한 때(2023. 5. 23.)와 논문으로 퍼내기 위해 작성한 때(2023. 11. 13.),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밝힌다.

43) ‘미주’에 해당하는 정확한 일본어는 ‘後注’ 또는 ‘エンドノート’이다.

‘주’마저 오류를 넘으로써 한 문장에서 오류가 두 개나 나왔다. 만약 기계번역의 초벌 상태로 번역문을 출간한다면 본 저자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 독자로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한 단어)의 오역으로 인해 원저자와 번역자, 나아가 번역서(번역 논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후편집을 통해 기계번역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결코 사소한 작업으로 평가될 수 없다.<sup>44)</sup>

#### 4) 도착어권에 맞는 어법

번역은 서로 다른 세계의 문화를 이어주는 교량이다. 원전(출발어권) 속 단어에 해당하는 어휘가 번역어(도착어권)에 부존재하거나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출발어권과 도착어권이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거나 같은 뜻을 다른 어휘로 쓰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런 복잡한 번역 환경에서 출발어권의 언어가 지시하는 정확한 의미의 도착어권 언어의 어휘를 찾는 것은 직역·의역에 관한 해묵은 번역계의 논쟁과 무관하게 번역의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우를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부존재하는 경우이다. 칸트(Kant) 원전에 대한 번역 논란<sup>45)</sup>에서 보

44) 한편, 명백한 오역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상 자연스러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데보라 스미스는 영어로 번역된 책, 『The Vegetarian』에서 ‘수간호사(首看護士)’를 ‘male nurse’로 ‘춘화(春畵)’를 ‘spring flower’로 번역했다. 박해현, “‘채식주의자’ 英譯은 원작에 기댄 제2의 창작?”, 조선일보, 2017. 1. 9., <[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9/2017010900269.html](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9/2017010900269.html)>, (2023. 5. 5. 검색).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의역)에 대해 문맥에 맞지 않은 오역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안미영은 『The Vegetarian』에서 명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몇 가지를 들었다. 예를 들어 원문의 “요의와 같음을 느껴 깨어난 참이었다”에서 “요의”를 생략하고 “갈증(thirst)”만으로 번역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서 주인공 “나”는 욕실(bathroom)에 간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안미영, “『The Vegetarian』에서의 명시화 번역전략 연구”, 『영어영문학』, 제23권 제1호, 미래영어영문학회(2018), 241-242쪽. 이처럼 번역자가 도착어권에 적절한 언어로 바꾼 것이 전후 맥락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갈려 오역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본 저자가 개인적 경험으로 든 사례는 도착어권의 어법이나, 원문과 도착어의 맥락으로 보나 오역임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과 구별된다.

45) 이른바 ‘아프리오리(a priori)’ 논쟁이 그것이다.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등 칸트의 3대 이성비판서를 완역(아카넷)한 백종현 교수는 오랜 기간 원전의 ‘a priori’를 ‘선형적(先驗的)’이란 말로 번역해 왔는데, 2018년 한국칸트학회가 펴낸 칸트전집(한길사)에서는 적절한 우리말이 없다는 이유로 소리 나는 대로 ‘아프리오리’로 썼다. 이로써 칸트 철학을 넘어 철학방법론에까지 넘나드는 논쟁으로 비화했다. 박상현, “철학 입문 50년 백종현 교수 ‘칸트사전

는 바와 같이 원전 자체에 대한 본질적 논의(철학 논쟁 또는 문학 논쟁 등)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도착어권 언어에서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적합한 단어가 없으면 번역을 포기하고 원전의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의미 전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등 깊은 논쟁이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서 원전의 의미를 살린 번역어를 선택했거나 그렇지 못하여 외국어를 그대로 쓴다면 번역자는 그 이유를 독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기계번역이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sup>46)</sup>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답이 없다’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비슷한 것을 찾아 답변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 때로는 ‘번역 포기’를 선택하기도 해야 하는 번역 작업에서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한다.<sup>47)</sup> 도착어권의 어휘가 없음에도 ‘유사 값’에 불과한, 기계번역이 제시한 어휘는 자칫 독자에게 원작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지점이 바로 인간 번역자의 후편집 과정에서의 노력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둘째,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양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번역가라야 정확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고 원전의 의미와 뉘앙스 차이까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문학번역의 경우 앞서 인용한 쿤데라에서와 같이 원전 저자가 사용한 개인적 문체의 미묘함을 찾아 도착어권의 복수로 존재하는 단어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써야 하는데, 인공지능 결과물이 그렇지 않다면 인간 번역자의 후편집 과정에서의 선택과 창의성이 중요하게 된다.

셋째, 출발어권과 도착어권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더라도 언어의 역사성·사회성으로 어휘가 같은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같은 한자가 달리 사용되거나 같은 뜻인

은 안내판이자 약도””, 연합뉴스, 2019. 5. 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004300005>>, (2023. 11. 13. 검색).

46) 지식과 정보의 차이는 과정(process)에 대한 설명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블랙박스(black box)로 되어 있어 설명할 수 없다면 정보일 뿐 지식이라 할 수 없다. 이는 반론과 비판을 허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47)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지식인데, 인공지능은 모른다는 자각이 없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정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데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한국어에서는 “직장에서, 직원이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뜻하는 ‘정년’의 한자어를 ‘停年’으로 쓰지만, 일본에서는 ‘定年’이란 한자어로 쓴다. ‘머무를 정(停)’과 ‘정할 정(定)’으로 다른 한자어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다르다. 단어뿐만 아니라 언어별로 직역하면 이상한 뜻으로 변하는 표현도 많이 있다. 속담이나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쓰기 힘든 표현 등에 대해 기계번역만 믿고 번역을 한 경우 전체 문장의 뜻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오역을 바로잡는 것은 기계번역의 후편집 작업으로서 인간 번역자의 상당한 창작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맥락에 따라 오역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이 한 번역에서도 위 데보라 스미스의 예(춘화, 수간호사)에서와 같이 전혀 엉뚱한 번역이 나오는 마당에 기계번역의 경우 이런 일은 더욱 비밀비재하다. 그런데 스미스 사례의 경우 명백한 오역이었어도 전후 맥락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심국 언어권 번역자의 오역과 주변국 언어권 번역자의 오역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지만, 언어의 헤게모니(Hegemony)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48)</sup> 이를 AI 번역으로 확장해 적용하면, 장치 AI 번역과 인간 번역에서 전자를 후자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본 나머지 오역 발생 시 후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아도 전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명백한 오역에 대해 일관되게 인간 번역자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맥락상 의미가 통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AI 번역이 인간 번역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기계번역의 오류를 찾아 바로잡는 것은 기계번역의 후편집 작업으로서 상당한 창작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8) 실제로 한강의 『채식주의자』에는 수많은 오역이 있고 이에 대한 국내 번역학계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원저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성공한 한외번역 사례(한강의 『채식주의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이형진의 헤게모니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형진,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번역학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번역학회(2018), 192-196쪽; 이형진,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번역학회(2016), 158쪽.

## 5) 심미성

위 3)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이고, 4)는 단어의 쓰임새가 달라서 생긴 오역이다. 그런데 기계번역의 경우, 위 외에도 원작의 뉘앙스, 즉 출발어권 언어 및 맥락을 기계번역이 담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는 겉으로만 보면 오류 또는 오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3) 및 4)와 다르다. 원작자가 원작에 대해 갖는 권위<sup>49)</sup>는 번역가가 따라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서 벗어나면 저작권법적으로는 저자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번역을 통해 원작이 다른 언어로의 변형 외에 내용이나 문체 등이 왜곡되는 경우 원작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같은 이치로 기계번역에서 후편집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창작적 기여가 될 것이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작의 저자가 번역하는 경우(‘자기 번역’)와 번역가가 번역하는 경우(‘타인 번역’)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경우 기계번역 결과물을 후편집하는 번역자는 원문에 들어 있는 원작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갈수록 기계번역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어 위 3) 및 4)와 같은 오류 또는 오역을 후편집을 통해 수정할 필요가 없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학번역이 속한 문학과 예술에는 정확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학이 있다. 단기간 안에 이런 영역의 미학을 기계번역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점에서 심미성 영역에서의 후편집은 인간 번역자의 매우 중요한 창작적 기여가 될 것이다.

한편, 위와는 반대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기계번역 이용자가 후편집 과정에서 의역하거나 의역의 수준을 넘어서는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원문 저자의 의도를 벗어나 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번역자 중에는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의역을 통해 새로운 창작을 과감히 시도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마거릿 미첼(Margaret Mitchell)의 소설 『Gone with the Wind』의 마지막 부분은 여주인공의 다음 독백,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sup>50)</sup>로 끝이 난다. 이 부분을 일본 번역자는 “明日

49) 쿤데라, 앞의 책, 160쪽, “권위 문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50) Margaret Mitchell, *Gone with the Wind*, Pocket Books, 2008, p. 1448.

はまた明日の陽が照るのだ”로 일역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어 번역본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는 거야”라는 번역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sup>51)</sup>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발전하여 이와 같은 번역을 하게 될 날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쉽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원작자 쪽에서 원문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고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번역은 원전을 넘어 새로운 미학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를 차용해 말하자면, 기계번역 후 인간 번역자가 기계번역이 할 수 없는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수정을 가한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확실히 있다고 할 것이다.

## (2) 맥락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AIGT와 AIAT 사이의 경계선 굵기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을 이용한 인간 번역자의 통제성·주체성이 중요하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번역이 놓여 있는 여러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계번역과 관련된 맥락으로 다음 몇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

### 1) 상대적 비율

위에서 본 명백한 오류의 수정[위 (1) 3)], 도착어권에 맞는 어법으로의 수정[위 (1) 4)], 심미성을 위한 수정[위 (1) 5)]이 전체 번역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면 이를 두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므로 기계번역을 이용한 인간 번역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논의를 차용해 검토하기로 한다.

51) 미국에서 원작이 출판된 것은 1936년이고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것은 大久保康雄·竹内道之助訳, 『風と共に去りぬ』, 三笠書房[5] 全3巻, 1938-39年(初訳版)이다. 본 저자가 확인한 일본어판(동 1973년 판)에서 “明日はまた明日の陽が照るの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는 거야”라는 표현이 한국어 번역본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 맞다고 하려면, 오히려 일본어판이 한국어판을 통해 중역(重譯)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의 중역은 주로 한국 번역이 일본 번역본을 통해 행해진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이 부분 번역이 한국어 번역에서 시도한 창의적 의역이라는 주장(남철진, 『우리네 삶 속 번역과 인문학』, 지식과감성(2020), 28-30쪽)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침해 또는 공정이용 판단에서는 ‘정당한 범위’를 넘을 때 침해라고 하며, 이를 ‘양적 범위’와 ‘질적 범위’로 나누어 고찰한다. 양적 범위는 “가져다 쓴 부분의 양 / 전체 저작물(피침해 저작물)의 양”의 비율로 정하는데, 저작물의 성격과 장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침해 저작물의 양(이 산식에서 분모)이 크면 클수록 같은 양을 가져다 썼어도 ‘정당한 범위’의 ‘양적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sup>52)</sup> 또한 양적 비율과 별개로 질적 범위에 관한 판단도 중요하다.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후략)<sup>53)</sup>

위 논리를 가져오면,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인간 이용자가 후편집을 통해 일부 수정했을 때, 그것의 양적 비율, 질적 범위에서의 주종관계 형성 등을 따져서 수정 부분, 즉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으로 인해 기계번역이 아닌 인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비율이나 관계는 저작물(번역물)의 종류나 분량, 그리고 언어 간 거리 등 여러 고려 요소와 종합해서 결정해야 하며, 단지 숫자로 나타나는 비율만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예로 설명해 본다. 마지막 번역 문장, “내일은 또 다른 하루이다”가 기계번역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인간 번역자가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는 거야”라고 바꾸었다고 전제할 때, 그 한 문장의 수정은 양적 범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질적 범위에서도 그 문장으로 번역문 전체의 평가가 달라질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간 번역자의

52) 물론 정당한 범위를 판단할 때, “가져다 쓴 부분의 양 / 침해 저작물의 양”의 비율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피침해 저작물이 방대한 것이어도 침해 저작물이 짧은 것이고, 그 짧은 침해 저작물의 양(분모)에서 침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이 각주의 산식), 위 본문의 산식에 따른 양적 범위 비율이 정당한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저자는 저작권침해에서 양적 범위에 관한 산식과 구별하여 이를 ‘표절 산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남형두, 『표절론』, 현암사(2015), 421쪽.

5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수정은 기계번역의 결과물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즉 AIAT가 아닌 AIGT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그런데 비록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한 문장일지라도 그로 인한 번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단순한 기계번역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인지, 인간 번역자가 기계번역을 이용한 것인지의 판단은 문학계, 번역문학계의 깊은 논의<sup>54)</sup>를 거쳐 내려져야 할 일이지 산식의 적용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문학을 비롯한 예술계의 건전한 논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 재판에서 문학계, 번역문학계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는 대신 명확하다는 이유로 특정 산식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 장르적 맥락

문학번역에서 번역 행위 자체가 창작(‘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때의 창작 행위)으로서 심지어 ‘번역상’까지 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표현의 다양성과 창작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번역은 그 자체가 그 창작 행위의 본령이다. 그런데 일상 회화, 이메일, 상품설명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서), 관광 홍보 책자 등을 기계번역에 의존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들은 내용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문건으로서, 기계번역이 진화하여 더욱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계번역으로 인간 번역 용역을 대체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하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장르적 맥락도 중요하다.

기능성이 강조되는 원문의 번역과 표현의 미학이 중시되는 문학번역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장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술논문의 기계번역은 어떤가? 연구자(저술자)가 자신의 모국어<sup>55)</sup>로 작성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출간하는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이용한 경우 전후 편집을 하지 않았다면 기계번역 사실을 밝혀야 하는가? 저자가 후편집을 하였다면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았다

54) 이 점에서 인공지능 번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논의는 문학의 문제, 즉 문학 또는 번역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문학 또는 번역문학의 본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 번역은 문학 또는 번역계의 위기가 아니라 문학·번역이 인공지능의 도전을 통해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55) 물론 논문을 포함한 학술 저술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외국어로 작성하기도 한다.

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될까? 나아가 외국어 초록 작성 시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학술 저술도 학술 영역의 종류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표현이 중시되는 학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와 내용 전달이 중시되는 학술 영역이 있다.

기능적 번역과 문학번역 사이에 학술번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르적 맥락에서 후편집이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후편집 과정에서 기계번역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 여하와 기계번역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의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는데, 자기 번역에서는 원작의 수준, 타인 번역에서는 후편집의 질과 양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 3) 번역의 목적이라는 맥락

번역의 목적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능력과 작문 및 번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과제(시험 포함)를 낸 경우 기계번역을 이용한다면, 전후 편집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수업방침 또는 학칙에 위반될 수 있다.<sup>56)</sup> 최근 ChatGPT의 교육기관 사용금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sup>57)</sup> 또한, 인간이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번역

56) 이는 시말서 또는 반성문을 인공지능(ChatGPT)으로 써서 제출한 경우에 비교할 수 있다. 정미경, “챗GPT, ‘인턴 시말서’도 썼다…“이젠 반성도 AI가 대신”, 서울경제, 2023. 2. 21.,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U41QR7G>>, (2023. 4. 30. 검색). 인간의 통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예컨대 비위행위, 제출처, 제출 목적 등을 입력했다고 가정), 이는 마치 매를 대신 맞거나, 감옥에 대신 투옥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벌금을 빌려서 납부한 것이라면 갚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갚을 수도 갚을 필요도 없음). 즉, 반성문을 쓰는 수고 자체가 일종의 징벌(징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성하면서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목적도 있는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반성문/시말서 제출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발각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는 반성문/시말서 제출 효력을 없애고 오히려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없는 쪽으로 나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출처에 대한 기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내심의 반성이란 본질의 부재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57) 급기야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ChatGPT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해 졸업이 유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 중에는 ChatGP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오인됐다며 강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학사 일정에 일대 혼란이 생겼다. 김은성, “챗GPT 베끼 학생들에 0점 ‘졸업유예’” … 미 대학 강사 논란”, 경향신문, 2023. 5. 20. 본 저자는 ChatGPT 선풍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일찍이 교육현장에서 ChatGPT 사용에 따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상한 적이 있다. 남형두, “[시론] 챗GPT가 촉발한 교육 현장의 문제”, 한국경제, 2023. 1. 30.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번 번역상 해프닝 외에 인공지능 영역 중 크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기계번역의 도움(전적이든 부분이든)을 받았다면, 이는 인간 이용자의 작품인가 기계번역 그 자체인가를 가르는 경계선 논의 외에 아래 행사 관련 논의(IV장)에도 연결된다.

### III. 기계번역을 둘러싼 본말전도 현상

#### 1. 전편집

기계번역을 이용하는 인간 번역자는 후편집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전편집 과정에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수도 있다. 자기번역의 경우 번역자이기도 한 저자는 기계번역을 통해 번역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음 집필 단계(기계번역을 기준으로 보면 ‘전편집’으로 볼 수 있음)부터 기계번역을 의식하여 평소와 다르게 모국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 지점이 바로 기계번역이 창작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대목이다. 저자(번역자) 스스로 다양한 선택과 표현을 줄이고 낮은 수준으로 획일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편집은 후편집과 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sup>58)</sup> 전편집은 번역기계가 섭취(feeding)하기 쉽도록 사전에 고치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것은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과도 관련되고, 허락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와도 관련될 수 있다. 여기에서 원작자가 자기 번역하는 경우와 타인 번역하는 경우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편집을 완벽하게<sup>59)</sup> 하면 할수록 후편집은 할 것이 없거나 줄어들게 된다. 전편집을 한 후 기계번역을 하면 이미 전편집으로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진 후 그것의 복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작자와의 관계 및 독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편집

58) 본 저자는 ‘전편집’에 법적 문제 외 다른 차원의 문제, 즉 기계번역을 위한 전편집이 강조될수록 (출발)언어의 고유성이 사라져 인류 문화가 획일화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장 2.항 “바벨탑의 비용 — 다양성 훼손”에서 논의한다.

59) 기계번역 소프트웨어가 오류 또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원전의 의도된 주어 생략, 문법 변형 등을 표준적 문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간 번역자의 통제성이 가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 전편집과 후편집의 상보적 관계

최근 미국 작가조합이 넷플릭스 등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와 진행해 온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을 선언했는데,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제작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시나리오 대본 초고를 작가들에게 수정해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sup>60)</sup> 이에 따르면 후편집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인간 작가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비록 갈등의 일방 당사자인 작가조합의 요구 사항이지만, 창작 또는 번역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작가조합의 주장을 이 논문에 적용하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전, 즉 전편집 과정에서 인간 번역자의 창작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번역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번역 대상을 선택하는 것<sup>61)</sup> 자체가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도움받기 전 인간 창작자(번역자)의 창작적 활동의 일부라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번역 과정에서 인간 번역자의 전편집이 수행된다면 AIAT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를 하면 1993년 일본 저작권심의회 보고서에서 일찍이 진단한 바와 같이 전편집과 후편집이 상보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sup>62)</sup>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60) 이상덕, “인공지능 창작물의 소유권은? … 저작권 분쟁 시작됐다”, 매일경제, 2023. 5. 9. 작가조합은 시나리오와 같은 문학적 자료는 AI가 생성해서는 안 되며, 작가의 정의를 사람으로 명시해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편, 작가조합의 파업은 2023. 5. 2. 시작하여 같은 해 9. 27. 종료했으며, 63년 만에 이루어진 배우조합의 동반 파업은 2023. 7. 14. 시작하여 같은 해 11. 9. 종료했다. 임미나, “할리우드 작가조합, 파업 종료 선언…“일터 복귀 가능””, 연합뉴스, 2023. 9. 27.,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065000075>>, (2023. 11. 10. 검색); 임미나, “할리우드 배우노조 파업 118일 만에 종료…노사 잠정 합의(종합)”, 연합뉴스, 2023. 11. 9.,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9070100075?input=1179m>>, (2023. 11. 10. 검색).

61) 위 II. 3. (1) 중 ‘번역 대상의 선택’.

62) 앞의 일본저작권심의회 보고서.

## 2. 바벨탑의 비용 — 다양성 훼손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전, 컴퓨터를 활용하여 출발어와 도착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연역적인 방식으로 번역하던 때, 언어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간체 언어를 만들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sup>63)</sup> 언어학적 고찰이 필요한 부분인데, 간략히 말하면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바로 번역하지 않고, 중간에 새로운 문법의 언어를 만들어 이를 거쳐 번역하는 방식이다.<sup>64)</sup> 언어의 통일화는 ‘현대판 바벨탑’으로 인류 역사상 많은 시도가 있었고, 소설<sup>65)</sup>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어떤 한국인 저자가 자신의 글(논문 등 학술 저술과 문학류의 저술)을 외국어로 번역 출판할 계획을 갖고 글의 전부 또는 일부(예를 들어 논문 초록)에 대해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저자가 평소 자신의 글 쓰는 습관에 따라 한국어 글을 완성한 후 기계번역으로 돌리면 원문과 다른 결과(외국어 번역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원문 자체에 논리성이 결여하거나 문법이 틀려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계번역을 탓할 수 없고 오히려 원문을 논리에 맞게 다듬고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아 해결할 일이다. 그런데 논리성 결여나 문법 오류가 아닌 경우가 문제이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어 문법에는 명사에 성(性)을 부여하지 않고 단수와 복수 구별도 명확히 하지 않는다. 나아가 관계사(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품사가 없다. 그런데 서구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계번역 서비스는 이런 한국어 문법과 글쓰기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 오류를 발생시킨다. 여기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계번역 서비스가 이해할 수 있도록<sup>66)</sup> 문장마다 주

63) 위 보고서 참조.

64) 최근 ChatGPT 이용에서 언어별로 제공되는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ChatGPT에 입력된 데이터의 양에서 언어별 데이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이라도 영어로 하는 경우와 한국어로 하는 경우, ChatGPT의 답변의 분량과 질은 매우 다르다. 한국어 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고 영어로 나온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과 둘째,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구축된 중간 언어 체계를 거쳐 각기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5)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것은 언어의 통일화까지는 아니고 단순화인데, 이로 인한 사고의 단순화와 획일화의 위험성은 소설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66) ‘이해’라는 것은 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이라 할 것이다.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Data Mining, 이하 TDM)과 머신 러닝(Machine

어를 등장시키는 등 우리 어법이나 문법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sup>67)</sup>

언어와 번역에는 헤게모니가 작동한다. 중심국 언어 간 번역에서도 오역이 문제되는데,<sup>68)</sup> 이는 한국어와 같은 주변국 언어와 중심국 언어 간 번역에서 발생하는 손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외번역에서 그 외국어는 주로 중심국 언어인 경우가 많은데, 문화와 언어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어 문장을 외국어로 번역(기계번역)하기 위해 한국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의 고유성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기계번역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기계번역을 위해 출발어의 고유성을 포기함으로써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획일화가 가속된다면 본말전도로서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성 훼손에 따른 문화의 황폐화는 기계번역이 추구하는 바벨탑의 비싼 비용 청구서가 될 것이다.<sup>69)</sup>

이상의 논의는 인공지능 번역에 관한 AIGT/AIAT 논의 외에 음악(AI-generated music, AI-assisted music), 미술, 영화 등 다른 창작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형식이 내용을 바꾸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인데,<sup>70)</sup> 그 초입에 위에서 말한 ‘전편집’이 있는 것이다.

Learning) 과정에서 행해지는 ‘feeding’과 맥락상 비슷한 것이다.

67) 번역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번역을 염두에 둔 저자는 원문을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악한 모국어 문장을 구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편, 장르에 따라서는 맞춤법을 일부러 무시하기도 하고 독자의 호흡을 위해 띄어쓰기 문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번역이 가져올 문화 재편 현상으로 인해 글에서 사투리(방언)가 사라지고 작가의 의도적인 문장의 맛이 사라지는 삭막한 통일 문제로 뒤덮이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쿤데라는 이를 두고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구사하는 표준 문장으로 자신의 글(프랑스어 쓴 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에 극도의 혐오감을 표시한다. 쿤데라, 앞의 책, 160쪽.

68) 위 쿤데라 사례.

69) 재독 한인 철학자 한병철은 이를 ‘잡다함(Diversität)’과 ‘상이성(Alterität)’으로 대비하여 설명한다. 상이성이 사라진 곳에 디지털화된 기계가 소화하기 좋은 다양함이란 곧 잡다함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병철의 주장이다. 한병철(이재영 역), 『타자의 추방』, 문학과지성사(2017), 35쪽. 한병철의 저술은 TDM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나, 그의 주장은 기계학습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70) 남형두, “[남형두의 법과사랑] 쿠팡플레이 드라마 ‘안나’ 사태로 본 플랫폼과 저작권”, 한국경제, 2022. 9. 19. 이 글에서 본 저자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는 말을 통해 플랫폼과 같은 소통의 통로와 수단이 창작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할 수 있음을 주장했는데, 이는 원활한 기계번역을 위해 인간 번역자 스스로가 자신의 창의적 표현을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고전번역의 특수성 — 전편집으로서 고전번역의 교감(校勘)

문학번역과 큰 틀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전번역을 들 수 있다. 고전번역에서 원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 번역 작업에 들어가기 전 정본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본화 작업’을 한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고전번역에서는 이를 특별히 교감<sup>71)</sup>이라고 하는데, 교감은 여기서 말하는 전편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72)</sup>

고전번역도 기계번역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sup>73)</sup> 향후 한외번역을 하는 문학번역원과 고전번역을 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발표를 통해 학문적 소통을 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1) 한문 교감 전문가인 박은희(한국고전번역원 선임전문위원)의 인터뷰 글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고전번역의 구조를 간략히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전번역이 고전 정리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중국에서는 고전 정리를 교감, 표점, 주석(註釋), 번역, 집일(輯佚), 색인(索引), 영인(影印)의 7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번역은 7대 분야 중 하나이며, 우리 고전이 모두 번역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은 교감표점만 뒤에 번역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어떤 책은 교감표점만 하거나 교감표점에 주석까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감표점 전문가와 주석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또 흩어져 있는 작품을 모아 엮거나 색인서를 만들고 영인서를 제작하는 일에는 서지학이나 문헌학,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번역의 질이 좋기 위해서는 그보다 멀리 있는 여섯 분야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번역뿐만 아니라 이 여섯 분야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림, “인터뷰: 한국 교감표점 전문가 박은희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전문위원”, 『고전사계』, 제45호, 한국고전번역원(2022), 21쪽.

72) 대법원은 교감에 대해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정본화 작업으로서 교감은 한문 실력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르면 누가 해도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다음 논문 참조. 남형두, “고전 국역과 저작권 문제 — 임원경제지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21).

73) 한국고전번역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7~2019년 ICT 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사업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으로 개발한 한문고전 자동번역 서비스(베타버전)를 오픈하여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에 대한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한문고전 자동번역 서비스 오픈 안내”, 2021. 1. 12., <<https://www.itkc.or.kr/bbs/boardView.do?id=2&bIdx=34695&menuId=99>>, (2023. 11. 10. 검색).

## IV. 기계번역 결과물의 사용에 따른 문제

### 1. 저작권법 위반 문제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기계번역 이용자가 자신의 것으로, 즉 자신의 번역물로 발표(공표)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비인간의 창작 가능성, 비인간 창작물 인정 여부, 저작물성, 권리능력 문제 등과는 차원이 다른 규범 세계의 문제이다. 이는 위 II장의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계번역 결과에 대한 창의적 기여 여부 논의에 따라 본 장에서의 논의, 즉 저작권침해, 업무방해, 나아가 표절 문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AIGT와 AIAT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논의도 본 장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기계번역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번역을 타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저자 스스로 기계번역을 통한 번역에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하 기계번역 이용자가 원작의 저자를 겸하고 있는지(아래 자기 번역), 원작의 이용자인지(타인 번역)로 나누어 논의한다.

#### (1) 자기 번역

여기서 논의는 원작자가 자신이 쓴 원작을 기계번역을 이용해 스스로 번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전후 편집이 없는 극단적인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원작에 대한 복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자기 번역에서 이런 극단적인 기계번역은 상정하기 어렵다. 자기 번역이 언제 계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i) 원작 집필 후 자기 번역을 한 경우, (ii) 원작 집필 때부터 자기 번역을 염두에 둔 경우이다. (i)의 경우 원작자는 기계번역에 맞게 전편집을 할 수 있고, (ii)의 경우 원작 집필 자체가 기계번역을 위한 전편집을 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자에게는 집필의 자유뿐 아니라 자기 작품을 변형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전편집이 이루어지든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 저자명 외에 번역자 명에 저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원작 집필과 번역이 동일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번역자 명을 따로 표기하지 않기도 하지만,<sup>74)</sup> 기계번역을 이용한 경우는 어떨까? 위 (i)과 (ii)에서와 같이 저자에 의해 기계번역 전에 전편집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기계번역에 대한 통제성·주체성이 있다고 보면 역자로 표기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상당 부분 후편집이 더해졌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2) 타인 번역

기계번역을 이용해 타인의 원작을 번역한 경우이다. 번역은 2차적저작물이므로 원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 침해가 된다. 그런데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했을 경우 원작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여기서는 논의를 위해 원작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만을 전제로 한다.

원작자가 타인(번역자)에게 번역을 의뢰했는데 그 번역자가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원작자는 번역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번역하면 되는 것일 뿐 반드시 인간이 번역해야 하는지, 기계번역을 활용해도 되는지, 더 나아가 극단적인 기계번역에 의존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저작권법은 번역을 2차적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저작권법 제5조 제1항), 번역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번역은 인간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위 II. 1. (2) 1)]. 그리고 번역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언어의 변형 과정에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극단적 기계번역은 복제일 뿐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는 번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계약에서

74) 대표적으로 소설 『하얀 전쟁』의 저자 안정효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처음 한국어로 썼다가 영어로 출판했고 다시 국내에서 번역 출간되었는데, 두 차례의 자기 번역(한영, 영한)이 있었으나 저자명 외에 역자명에 안정효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번역의 방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기계번역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번역계약에서 대금이 지급된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통상적인 번역의 대가라 할 만한 수준의 금액<sup>75)</sup>이라면 당사자 간의 의사에서 극단적인 기계번역은 배제됐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AIAT인 경우이다. 즉, 기계번역을 이용한 번역으로 인정할 만한 번역자의 통제성·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작자는 번역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역시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먼저 저자와 번역자 사이에 번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계번역 사용 여부 및 정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 한편, 번역출판 계약은 아니지만, 이번 문학번역원 해프닝 후에 개정된 공모전 요강<sup>76)</sup>은 지원자가 응모함으로써 문학번역원과 응모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sup>77)</sup> 기계번역의 이용을 일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기계번역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와 관련해 여전히 해석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번역의 전면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기계번역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나 당사자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기계번역을 허용하는 수준이란 어느 정도일까가 문제인데, 번역 대상물

75) 이른바 '이상문학상 수상집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상작을 모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이라는 단행본을 낸 피고 출판사(문학사상사)가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을 넘어 계속 발행하자, 원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작품집의 복제·배포의 금지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수상자와 출판사 간에 출판 기간이나 저작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문제로 되었다. 법원은 저작권 또는 복제·배포권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서 원고 협회에 신탁한 작가 대부분이 기성 작가로서 '이상문학상'의 수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이점이 크지 않고, 상금이 복제·배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밀줄은 본 저자가 친 것임).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는 금액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해석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76) 문학번역원은 이 해프닝 이후 공모전 요강을 바꾸었다. 최훈진,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신인상 응시 자격에 '기계와의 공동번역 불가' 추가", 동아일보, 2023. 3. 8. 이에 대한 상세는 뒤의 '표절' 부분(IV. 3.)에서 논의한다.

77) 번역자가 기계번역을 이용했는지는 본인이 자인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문학번역원 해프닝에서도 기계번역이 논란된 것은 결국 수상자가 기계번역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 곧 자인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해프닝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 장르, 번역자, 계약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계번역의 이용 및 그 정도가 번역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번역자는 저자에 대해 계약상 책임, 즉 손해배상책임 그리고/또는 번역출판물의 폐기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상 책임 외에 저작권법상 책임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극단적인 기계번역(AIGT)이 아닌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경우(AIAT)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저작권법상 책임을 번역자에게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이 번역에 관해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인간 번역자의 기계번역에 대한 통제성·주체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AIAT를 인간 번역자의 번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제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기계번역(AIGT)의 경우 번역자가 자신의 이름을 역자명에 기재한다면, 이는 저자의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기계번역이 복제물에 불과하다면, 그 복제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은 저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동일성유지권도 문제가 된다. 즉, 원작자 입장에서 2차적저작물은 원작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극단적인 기계번역은 단순한 복제에 불과하므로 그 복제물(극단적인 기계번역 결과물)에 저자의 동일성유지권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기계번역의 결과 오류, 오역 등으로 저작물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다면, 저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격권 침해에 민감한 원작자라면 심각한 오류가 들어 있는 기계 번역물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sup>78)</sup>

78) 이 점에서 기본적으로 문학번역은 기계번역에 친숙하지 않다고 본 일본저작권심의회 보고서는 30년 전의 것일지라도 상당한 해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기계번역 시스템에서는 2차적저작물로 평가될 만한 번역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편집이나 후편집 등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필요하며, 특히 문예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학술적인 분야 등에서는, 예를 들면 외국어의 기술적인 문장의 대의를 대중 파악하기 위해서, 원문을 기계적으로 입력해 얻은 결과를, 다소의 오류나 읽기 곤란함은 있어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는 이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번역물은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기술 동향 등에 따라서는 장래의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일본저작권심의회 보고서 참조.

## 2. 저작권법 외 법률 위반 문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독자의 선택권 및 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밝히지 않았어도 저작권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sup>79)</sup> 규범(법)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저작권법 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sup>80)</sup>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프로바둑 대회에 출전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가 된다는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sup>81)</sup> 프로바둑 대회를 개최한 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문학번역에서도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역상 공모전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것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여 심사 주체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문제로 된다. 물론 업무방해죄는 위법범이므로 실제 심사자의 업무를 방해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모두에 언급한 문학번역원의 해프닝은 공모 요강에 기계번역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에서도 기계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로서 경제적 이익의 수취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방해나 사기와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 즉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모전이나 경제적 이익의 수취가 관련되지 않는 경우라면 앞서 본 저작권법 외에 형법적으로도 규제하기 어렵다. 이때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절’이다.

79)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의 아웃풋인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자신의 번역물로 출판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상 문제되지 않는데 본문에서 저작권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한다.

80)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1) 바둑 입단대회에서 몰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기사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적 있다. 방진혁, “바둑 입단대회에서 AI로 ‘컨닝’한 바둑기사 실행”, 서울경제, 2020.

7. 1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BAFAZ47>>, (2023. 11. 13. 검색).

### 3. 표절

문학번역원 공모전의 당초 요강(포스터)에는 “모든 부문 공동번역 불가”라고 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붙임 자료 4. “공모전 창작물 보호 가이드라인”에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가정이지만 어떤 응모자가 인공지능 번역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번역한 것(AIGT)을 제출했다고 할 때, 이를 두고 인공지능과의 ‘공동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위 가이드라인의 ‘제3자의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모전 요강은 물론, 달리 저작권법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 결과물(AIGT)을 자신의 번역물로 제출했다면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표절은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sup>82)</sup>이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남’에는 ‘타인’ 외에 ‘비인간’<sup>83)</sup>도 들어간다.<sup>84)</sup> 따라서, 직접 번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sup>85)</sup>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번역물로 공표한다면, 가사 저작권침해, 업무방해, 사기죄 등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문학번역원 해프닝 이후 바뀐 공모전 요강에는 “모든 부문에서 공동번역은 불가하며, 타의 작품 표절이 확인되는

8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절”,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1%9C%EC%A0%88>>, (2023. 5. 10. 검색).

83) 인공지능, 동물, 초자연적 존재 등.

84) 남형두, 앞의 책(표절론), 231, 240, 331쪽 등. 본 저자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정직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썼는데(671쪽), 여기에서 ‘남의 것’에는 ‘타인의 것’ 외에 ‘인공지능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본 저자는 후속 저서에서도 인공지능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표절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남형두, 『표절 백문백답』, 청송미디어(2017), 12면 문답.

85) 한편, 기계번역을 이용한 이용자는 자신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 기계번역 전후에 편집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주장의 진위(전후 편집 사실) 및 타당성(그 전후 편집의 창작성)은 원문을 그가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기계 번역기에 입력한 결과물(A)과 인간 이용자의 번역물(B)을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A와 B 사이의 차이 부분(C), 즉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A-B) 또는 B에서 A를 제외한 부분(B-A)의 존재 및 그 정도(정량적 부분), 그리고 C에 A와 다른 인간의 창의성을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는지(정성적 부분) 등이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sup>86)</sup> 여기에서 “타의 작품 표절”의 ‘타’에는 사람 외에 인공지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정량/정성) 인공지능 번역기에 의존했을 때 ‘타의 표절’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 II. 3.에서 논의한 인간의 통제성·주체성, 맥락 등을 두루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기계번역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물(AIGT)를 전제로 한 것인데, 기계번역을 이용한 것으로서 인간 번역으로 볼 소지가 있는 AIAT의 경우에도 그 번역의 과정 및 기계번역에 의존한 정도를 밝혀야 할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논의한 표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더욱 상세한 논의 끝에 정치(精緻)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표절은 법적 책임이 아닌 윤리적 영역으로서 해당 영역, 예컨대 교수라면 대학, 작가라면 작가협회, 학생이라면 교육기관 등에 있는 윤리위원회 등에서 제재될 수 있을 것이다.

## V. 마무리<sup>87)</sup>

세계 언어에는 중심국 언어와 주변국 언어가 있으며, 그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사실이다.<sup>88)</sup> 같은 뿌리에서 나온 영어,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서구의 중심국 언어가 아닌 언어권으로서, 일찍이 번역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쏟았던 일본을 제외하고, 국가의 위상이나 문학에 대한 관심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한국을 꼽는다면 이상한 일일까? 케이팝(K-pop) 열풍에 따른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및 몰라보게 높

86) 문학번역원은 2023년 번역신인상 공모 안내에서 위 문구를 추가했다. 한국문학번역원, “2023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공모 안내”, 2023. 3. 7., <<https://ltikorea.or.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14857&pageInde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23. 11. 10. 검색).

87) ‘결론’ 대신 ‘마무리’로 제목을 단 것은 이 논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결론이라는 용어를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장의 표제와 같이 일단 매듭짓고 이후 열린 논의로 연결하고자 한다.

88) 이형진, 앞의 논문(주 48).

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한외번역)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때맞춰 인공지능 번역 성능의 눈부신 발전은 문학번역 영역에까지 들어와 한국의 번역문학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sup>89)</sup>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나아가 그것을 인간 번역자의 번역물로 볼 수 있는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는 서서히 법률문제로 들어오고 있다. 권리담론이 강화되고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사법화가 진행되는 조류에 따라, 갈수록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한 번역(AIGT)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번역(AIAT)의 경계선을 그어달라는 요구가 법률가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지난 수년 사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표절 문제에서 ‘연속된 몇 개의 단어’를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판정 기준 도입 요구가 거뒀던 것처럼, 경계선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sup>90)</sup>

그러나 번역은 문학과 창작 영역이다. 인공지능은 기술이다. 이 둘 사이에서 경계선을 확정적으로 그을 수 있는 사람은 문학가, 기술자, 법률가 등 그 누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전공자로서 본 저자는 법률가의 역할이 인간 번역에 포섭될 수 있는 기계번역과 그렇지 않은 기계번역을 나누는 요소와 요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문학가와 기술자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보는 데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저자는 서론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에서 ‘경계선 긋기’라는 과제를 문학(번역)이 법학에 던져주었다고 했다.<sup>91)</sup> 이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논의의 골격과 방식을 만들어 다시 문학(번역)계로 돌려드린다고 말하고 싶다.

## 문학·번역계로 다시 던지기

일본 문화평론가인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일본

89) 본 저자가 이 글의 초안을 발표한 문학번역원 심포지엄도 문학번역원이 공모한 번역신인상 수상자가 기계번역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번역이 문학번역계에 작지 않은 파문을 던졌음을 알 수 있다. 위 주 4) 참조.

90) 이런 식의 기계적 접근 방식이 표절 논의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합리적 논의를 저해했다. 이에 대해서는 남형두, 앞의 책(표절론), 36-38, 309-310쪽.

91) 위 주 5).

의 유명 문학상의 1차 관문을 통과한 해프닝을 두고, 이를 통해 이야기는 무엇이며 소설이란 무엇인지 같은 질문을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sup>92)</sup> 같은 취지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촉발한 인간 번역의 한계, 달리 말하면 기계번역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의 문제는 번역문학계에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 논의를 통해 번역의 본질에 더욱 다가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인간 창작물에 유사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때로는 인간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문학에서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간의 언어로 된 것을 인간이 읽고 감동하며 소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인간을 초월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원문이 존재하는 번역에서는 원문에 다가서는 것이 번역의 본질이지 원문을 뛰어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은 속도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이와 별개로 정확성이나 심미성·예술성에서는 인간 작가 또는 인간 번역가와 유사해지는 것이 기계번역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에 근접해지고는 있어도 그것이 정복될 수 있는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다.

### 과도한 사법화 경계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은 저작권과 표절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데, 특히 기계번역 산출물을 인간 번역자의 명의로 발표(출간)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저작권침해, 업무방해 등으로 규율할 수 없다면, 법 외에 윤리적 영역인 표절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AIGT와 AIAT의 경계선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때 정량적인 기준에 지나치게 경도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른 논란은 종래 표절검색 프로그램에 따른 표절 판정에서와 같이 과도한 사법화(Teubner 식의 Juridification)의 위험<sup>93)</sup>이 따

92) 오쓰가 에이지(大塚英志)(선정우 역), 『감정화하는 사회(원제: 感情化する社会)』, 리시올(2020), 269-276쪽.

93)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법이 침습해 들어가는 현상으로는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기 어렵다. Gunther Teubner, “Juridification — Concepts, Aspects, Limits, Solutions”, in Gunther Teubner (ed.), *Juridification of Social Spheres — A*



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VI. 여론(餘論) — 문학번역의 미래

### 1. 기계번역의 한계

충직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에 대해 틀린 답을 내놓을지언정 거부하지 못한다. 위에서 본 명백한 오역·오류는 이런 기계의 한계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식이 되는 것인데,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에서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 그 속도와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번역물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문학번역은 문학의 한 부분이다. 문학이 무엇인가? 기계는 문학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나는 예술은 믿지 않고 예술가를 믿는다(I don't believe in art. I believe in artists)”라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말은 불편하지만, 문학번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무엇이 번역이냐에 대해 인간이 한 것이 번역일 뿐, 기계가 한 것은 번역일 수 없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 원문에 대한 번역은 오직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믿는 이도 있지만,<sup>94)</sup> 그와 같은 해답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기계가 못할 것도 없다. 오직 하나의 번역만 가능하고 달리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번역의 설 땅은 없어지고 기계번역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어휘 수가 다르고 단어의 쓰임새가 다르며 이용자의 사고 구조가 다른 두 언어 간 번역을 통해 두 문화를 타협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자신감 내지는 강박관념의 발로가 아닐까?<sup>95)</sup> 타협되고 접근될 수 없는 협곡·절벽의 존재를 검

*Comparative Analysis in the Areas of Labor, Corporate, Antitrust and Social Welfare Law*, Walter de Gruyter, 1987, pp. 3-19.

94) 정영수의 단편소설 「애호가들」 중에서. 정영수, “애호가들”, 정지돈 외 9인(편), 『창백한 말』, 제6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과지성사(2016).

95) 베나민(Benjamin)은 번역가의 과제를 언어 간 최종적 화해로 보는 데 반해, 데리다(Derrida)는

손히 인정한다면 기계번역으로도 바벨탑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2. 역효과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발전과 손쉬운 접근 및 사용은 자기 번역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전문 번역가에 의한 타인 번역 대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이유로 기계번역을 통한 자기 번역(물론 후편집이 뒤따르는 기계번역)에 의존할 경우, 자칫 수준 높은 학술물이나 문학작품의 가치가 추락해 형편없는 작품이 될 위험성이 있다.

문학번역(한외번역)에서 기계번역에 의존할 경우 인간 번역자의 고뇌를 찾아볼 수 없는 밋밋하고 평범한 문체의 작품으로 전락함으로써 한국문학을 소개하려다 그 우수성을 사라지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전편집은 한국문학의 고유성을 상실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다.

---

번역을 원본의 결여를 대리보충하는 행위로 본다. 정혜옥, “테리다의 언어의 간극과 번역”, 『비평과이론』, 제10권 제1호, 한국비평이론학회(2005), 181쪽. 베냐민과 테리다 사이에는 번역에 관한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본 저자는 완벽한 하나의 해답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의 번역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 번역기는 강박을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 강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고유성이고 그곳에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보면 무책임한 발언일까?

**Abstract**

**Copyright Law Issues Regarding AI-based  
Literature Translation**  
— Déjà-vu of the Tower of Babel?

Hyung Doo Nam\*

Translation is a form of creativity, and AI creativity is making remarkable strides in many fields, including music, art, and literature, but especially in literature translation, where AI-based machine translation is becoming a reality. The recent happening about the winner of the Newcomer Award Competition of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who was found to have utilized machine translation, has drawn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boundaries between machine and human translation. I argue that AI-generated translation (AIGT), which is a purely AI translation without human assistance, is only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while AI-assisted translation (AIAT), which is a human translation with the help of AI, can be a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as a translation. The distinguishing factor between the two is the control and subjectivity of human users of machine translation in the post-editing process, and the context surrounding the transla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excessive pre-editing by human users to facilitate machine translation may undermine the diversity of the original text. Once the legal status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has been determined, I discus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human users to exercise due care at the stage of publication. The legal liability of failing to disclose that a work is the result of machine translation is also discussed, as well as

---

\* Professor, Yonsei Law School

plagiarism liability, which is not a legal liability.

### Keywords

Translation, Literature translation, AI, AIGT, AIAT, a derivative work, Tower of Babel, Plagiarism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남철진, 『우리네 삶 속 번역과 인문학』, 지식과감성(2020).
- 남형두, 『표절론』, 현암사(2015).
- \_\_\_\_\_, 『표절 백문백답』, 청송미디어(2017).
- \_\_\_\_\_, “법과 문학, 오만과 편견을 넘어”, 남형두(편), 『문학과 법 — 여섯 개의 시선』, 사회평론아카데미(2018).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영미고전문학번역 평가사업 - 번역문화 혁신을 위한 현황점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사회 일반연구분야 연구결과보고서(2004).
-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선정우 역), 『감정화하는 사회(원제: 感情化する社會)』, 리시울(2020).
- 정영수, “애호가들”, 정지돈 외 9인(편), 『창백한 말』, 제6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과지성사(2016).
-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김병욱 역), 『배신당한 유언들(원제: LES TESTAMENTS TRAHIS, 1993)』, 민음사(2013).
- 한병철(이재영 역), 『타자의 추방(원제: Die Austreibung des Anderen: Gesellschaft, Wahrnehmung und Kommunikation heute)』, 문학과지성사(2017).
- 남형두, “고전 국역과 저작권 문제 — 임원경제지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21).
- \_\_\_\_\_, “빅테크에 대한 국제사법의 대응 -구글 합의관할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국제거래법연구』, 제31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2022).
- \_\_\_\_\_, “한시(漢詩)의 표절에 관한 법학적 논의 -허난설현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제39집, 연민학회(2023).
- 안미영, “*The Vegetarian*에서의 명시화 번역전략 연구”, 『영어영문학』, 제23권 제1호, 미래영어영문학회(2018).
- 이수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창의성 - 규칙과 변형, 그리고 맥락화”, 『프랑스학연구』, 제86호, 프랑스학회(2018).
- 이형진,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번역학회(2016).
- \_\_\_\_\_,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논란과 논쟁을 번역하다”, 『번역학연구』, 제19권

- 제4호, 한국번역학회(2018).
- 정혜옥, “데리다의 언어의 간극과 번역”, 『비평과이론』, 제10권 제1호, 한국비평이론학회(2005).
- 김예림, “인터뷰: 한국 교감표점 전문가 박은희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전문위원”, 『고전사계』, 제45호, 한국고전번역원(2022).
- 김은성, “‘챗GPT’ 베낀 학생들에 0점 ‘졸업유예’” … 미 대학 강사 논란”, 경향신문, 2023. 5. 20.
- 남형두, “[남형두의 법과사랑] 쿠팡플레이 드라마 ‘안나’ 사태로 본 플랫폼과 저작권”, 한국경제, 2022. 9. 19.
- \_\_\_\_\_, “[시론] 챗GPT가 촉발한 교육 현장의 문제”, 한국경제, 2023. 1. 30.
- 노승영, “[겨울] 복원”, 경향신문, 2023. 11. 9.
- 박동미, “[단독] ‘기계 번역’ 기준도 세우기 前 수상… AI와 공생, 사회·윤리적 대응 시급”, 문화일보, 2023. 2. 8.
- \_\_\_\_\_, “[단독] ‘AI 진화의 역설’… 한글 모르는데, 한국번역상 탔다”, 문화일보, 2023. 2. 8.
- \_\_\_\_\_, “내가 번역상 받은 게 AI문제와 연결돼 화제된 것 놀라워”, 문화일보, 2023. 2. 9.
- 박상현, “철학 입문 50년 백종현 교수 “칸트사전은 안내판이자 약도””, 연합뉴스, 2019. 5. 16.
- 박성호, “[박성호의 지재 공방]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 법률신문, 2023. 3. 16.
- \_\_\_\_\_, “[박성호의 지재 공방] 카메라 ‘셔터’ 누르기, 혹은 AI ‘프롬프트’에 텍스트 입력하기”, 법률신문, 2023. 3. 23.
- 박해현, ““‘채식주의자’ 英譯은 원작에 기댄 제2의 창작””, 조선일보, 2017. 1. 9.
- 방진혁, “바둑 입단대회에서 AI로 ‘퀸닝’한 바둑기사 실행”, 서울경제, 2020. 7. 15.
- 이상덕, “인공지능 창작물의 소유권은? … 저작권 분쟁 시작됐다”, 매일경제, 2023. 5. 9.
- 임미나, “할리우드 작가조합, 파업 종료 선언…“일터 복귀 가능””, 연합뉴스, 2023. 9. 27.
- \_\_\_\_\_, “할리우드 배우노조 파업 118일 만에 종료…노사 잠정 합의(중합)”, 연합뉴스, 2023. 11. 9.
- 정미경, “챗GPT, ‘인턴 시말서’도 썼다…“이젠 반성도 AI가 대신”” 서울경제, 2023. 2. 21.

최훈진,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신인상 응시 자격에 ‘기계와의 공동번역 불가’ 추가”, 동아일보, 2023. 3. 8.

Google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 Google, <<https://policies.google.com/terms?hl=ko>>, (2023. 5. 21. 검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절”,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1%9C%EC%A0%88>>, (2023. 5. 10. 검색).

한국고전번역원, “한문고전 자동번역 서비스 오픈 안내”, 2021. 1. 12., <<https://www.itkc.or.kr/bbs/boardView.do?id=2&bIdx=34695&menuId=99>>, (2023. 11. 10. 검색).

한국문학번역원, “2023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공모 안내”, 2023. 3. 7., <<https://ltikorea.or.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14857&pageInde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23. 11. 10. 검색).

## 2. 국외문헌

Guillermo Cabanellas, *The Legal Environment of Translation*, Routledge, 2014.

Jacques Derrida (Trans. Joseph F. Graham), “From Des Tours de Babel”,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Rainer Schulte & John Biguenet (e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Scott McGill, *PLAGIARISM in Latin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Margaret Mitchell, *Gone with the Wind*, Pocket Books, 2008.

Ruth L. Okediji, *Creative Markets and Copyright in the Fourth Industrial Era: Reconfiguring the Public Benefit for a Digital Trade Economy*,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 2018, Issue Paper No. 43.

Gunther Teubner, “Juridification — Concepts, Aspects, Limits, Solutions”, in Gunther Teubner (ed.), *Juridification of Social Spheres — A Comparative Analysis in the Areas of Labor, Corporate, Antitrust and Social Welfare Law*, Walter de Gruyter, 1987.

半田正夫・松田政行,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1』(第2版), 勁草書房, 2015.

Annemarie Bridy, *Coding Creativity: Copyright and the Artificially Intelligent Author*, 2012 Stan. Tech. L. Rev. 5 (2012).

Ralph D. Clifford,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ra of the Creative Computer Program: Will the True Creator Please Stand Up?*, 71 Tul. L. Rev. 1675 (1997).

Robert C. Denicola, *Ex Machina: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Generated Works*, 69 Rutgers U.L. Rev. 251 (2016).

Arthur R. Miller,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Databases, and Computer-Generated Works: Is Anything New Since CONTU?*, 106 Harv. L. Rev. 977 (1993).

Shlomit Yanisky-Ravid & Cynthia Martens, *From the Myth of Babel to Google Translate: Confronting Malicious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 and Algorithmic Biases in Online Translation Systems*, 43 Seattle U. L. Rev. 99 (2019).

上野達弘, “著作権法における侵害要件の再構成(2・完) — 「複製又は翻案」の問題性—”, 知的財産法政策研究 42号, 2013.

奥邨弘司, “クラウド・サービスと著作権”, Law & Technology, No. 68, 2015.

著作権審議会第9小委員会(コンピュータ創作物関係)報告書, 公益社団法人著作権情報センター CRIC, 平成5年11月 文化庁(1993), <[https://www.cric.or.jp/db/report/h5\\_11\\_2/h5\\_11\\_2\\_main.html#3\\_1](https://www.cric.or.jp/db/report/h5_11_2/h5_11_2_main.html#3_1)>, (2023. 4. 30. 검색).